



의안번호	제134호
------	-------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논산시장
제출연월일	2018. 11. 19.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134호

제출연월일 : 2018. 11. 19.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1. 제안이유

- 생활밀착형 상수도 요금 연체료 산정방식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시민부담 경감을 위한 일부 조항 내용 변경 필요와
 - 논산시 상수도 요금 가산금 부과 방식 개선(고정비율→일할계산)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임(제2018-205호)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법규와 국민 불편 자치법규 정비개선(이의신청 및 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요구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목을 개선 내용과 맞도록 변경하고 수도요금 가산금 부과방식을 고정비율(채납액의 2%)에서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납부 시 일할계산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개선(안 제36조)
- 나. 요금등의 감면 및 지원 일부를 개정하고, 같은 호 제7호를 신설(안 제40조 제1항 제7호)
- 다. 지방분권 건의과제 및 규제개혁에 따라 정비(안 제45조 제1항)
- 라. 이의신청 기간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정비(안 제50조 제1항)
- 마. 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기간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정비(안 제5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붙임 참조
- 나. 예산 조치 : 해당 없음
- 다. 기타사항

- (1) 논산시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 대상 아님
- (2)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3)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 (4) 규제심사 : 대상 아님
- (5)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
 - (가) 예고기간 : 2018. 10. 10. ~ 2018. 10. 30.
 - (나) 결 과 : 의견없음
- (6)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 (7) 충청남도소관실과 :물관리정책과 (☎041-635-2733)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 (연체금 및 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까지는 다음 산식에 따라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체금 = 미납요금 × 2/100 × 연체일수/월력(月曆)일수

제4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

제40조제1항제6호 중 “고등학교에만 업종별 요금표에서 일반용 1단계를 적용함.”를 “국·공립유치원추가, 고등학교시설”로 한다.

제40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시설

제45조 제목 중 “망실”을 “잃음”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망실하였을”을 “잃어버렸을”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한파,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동파, 잃음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제1항 중 “90일”을 “60일”으로 한다.

제52조 제목 및 본문 중 “지방세”를 각각 “국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 또는 처리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맑 은 물 과 장	박 찬 택
	수도행정팀장	김 봉 순 (041-746-6351)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6조(가산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 사용 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 변상금, 과태료 등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은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제36조(연체금 및 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까지는 다음 산식에 따라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체금 = 미납요금 × 2/100 × 연체일수 / 월력(月曆)일수
제40조(요금등의 감면 및 지원) ① (생략) 1. ~ 3. (생략) 4. <u>천재지변</u> 5. (생략) 6. <u>수도사용자 중에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만 업종별 요금표에서 일반용 1단계를 적용함.</u> 7. <u>신설</u> ② (생략) 제45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제40조(요금등의 감면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 <u>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u> 」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 5. (현행과 같음) 6. <u>수도사용자 중에서 국·공립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시설</u> 7. 「 <u>사회복지사업법</u> 」 제2조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시설 ② (현행과 같음) 제45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및 잃음 등

<p>대한 책임)</p> <p>①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가 수리비 및 계량기 등 기물 구입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제47조의 규정에 따른다.</p> <p>② (생 략)</p> <p>제50조(이의신청)</p> <p>① 이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과 그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는 날부터 <u>90일</u>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정한 기준을 따른다.</p> <p>②. ~ ③. (생 략)</p> <p>제52조(<u>지방세</u>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 및 결손처분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u>지방세</u> 징수의 예에 따른다.</p>	<p>에 대한 책임)</p> <p>① ----- <u>잃어버렸을</u>----- ----- ----- -----.</p> <p><u>다만, 한파,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동파, 잃음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0조(이의신청)</p> <p>① ----- ----- ----- ----- --- <u>60일</u>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정한 기준을 따른다.</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52조(<u>국세</u>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 및 결손처분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u>국세</u> 징수의 예에 따른다.</p>
---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 당 없 음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나. 추계결과

3. 작성자

맑은물과장 박찬택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수 도 법」

제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요금이 정하여지면 3개월 이내에 수도요금 생산원가, 요금부과 단가, 재원부족액, 부족 예산 충당 계획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일반수도사업자는 같은 법 제11조· 제12조에 따른다.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수도요금 감면)① 법 제3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 1의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돗물의 요금 할인을 등 수돗물의 요금 할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 생활밀착형 상·하수도 요금 연체료 산정방식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제도개선 추진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 국민 불편 제거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 이의신청 기간이 행정 편의적 이라는 지적이 있어 개정요구
- 법 제24조제4항에 따르면 과태료 결손처분은 국세징수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법과 달리 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하고 있어 상위법에 반함.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국세징수법에 결손처분 규정이 없는 상태여서 위법을 논하기는 곤란하지만 정비 필요